

진실규명 뒷전... 끝없는 정치공방 우려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쟁점과 전망

조사 범위 등 현격한 입장차 진통 예상

여야는 26일 논란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사의 목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개입 의혹 및 이후 수사 과정은 물론 폭로 과정의 의혹을 규명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도 조사의 목적으로 적시했다.

여야는 국조 요구서에서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 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국조 범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 및 수사 관련 의혹과 함께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조사 범위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가지를 적시했다.

국조 특유의 여야 동수의 18명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국조 요구서를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조요구서가 제출됐으나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 및 수사 관련 의혹과 함께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양당의 관점 차이는 국조 과정에서 진통을 예

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가보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축소·은폐 수사 배후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또 대선 직전 경찰 수사과정에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하면서 경찰 수사에 압박을 가해 축소·은폐시켰다고도 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없었고 몇몇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다. 대신 이 사건은 민주당 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리보장을 내세운 '매관매직 공작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 인사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인권유린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과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6일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 내 생산업체를 방문해 공장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 전남테크노파크 방문 문재인 의원

“국조서 국정원 선거 개입 날낫이 밝혀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6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한 것을 새누리당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라고 연일 비난하는 데 대해 "외눈박이 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26일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 내 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 지역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있다 해서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NLL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한다고 해도 NLL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으로 휴전선의 긴장이 완화된 것

처럼 이는 NLL을 둘러싼 긴장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과거 한일정상회담 문서는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보다 낮은 외교문서인데도 공개되는데 40여년이 걸렸다"며 "국정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조사가 된다면 이번 대선시기 국정원 선거개입 실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광주시민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을 한 뒤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정원의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남재준, 공작정치 행동대장... 사퇴해야”

민주당은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임·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이유로 '국정원의 명에'를 내세운 남 원장에 대해 '남 원장은 정말 우리나라 국정원장인가. 국정원

의 명에만 있고 우리나라, 외교는 없는가. 누가 애국이고 매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화록 등급을 국정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그림 표구를 맡은 사람이 그림을 마음대로 하는 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검찰로 출두해야 할 이런 국정원장을 출근하게 둘 건가"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남 원장은 국

조를 덮기 위해 법과 역사 앞에 회의록의 악의적 왜곡과 불법 공작정치를 저지른 행동대장, 범법자이자 대한민국의 외교파탄의 주범"이라며 "국격을 훼손한 '제2의 윤창중'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진실을 왜곡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 남재준 원장을 사퇴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남 원장에 대한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적당히 (수사) 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중에) 전화를 했다는 데 상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전화했다는 시점에 박 전 국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지 않나"고 말했다.

“盧 서거때도 추모열기 비판

국정원서 댓글 무더기 유포”

민주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분위기를 비판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노 전 대통령과 추모 열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수 백개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댓글 유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는 물론 다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네이트' 등에도 달렸다.

검찰이 확보한 댓글에는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겠다", "비리로 끝난 노무현, 그가 남긴 것은 편 가르기와 반미, 친북 단 세 글자로 요약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주변의 뇌물수수에 대해 원망하다가 검찰 수사에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 "놈 현이가 저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라는 글도 댓글에 있었다.

새누리 중진들도

‘대화록 공개’ 유감

새누리당 정의화, 남경필 의원 등 5선의 중진이 뒤늦게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상회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의 뜻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금도를 벗어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도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과거의 역사가 된 일을 가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 소탐대실하는 여러서움을 경계하면서도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가 국익에 부합했는지, 여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가!

지하2층 ~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지하2층 PC방 203평×200만원 = 4억6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지하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평 × 150만원 12억8100만원
지하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평 × 200만원 7억7400만원
지하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지상2층 ~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지하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지하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하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지상3층 ~ 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하1층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